

제8장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정책 및 현황과제

송두범(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문제제기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197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지역과 캐나다의 퀘벡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적 논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와 지역 개발, 사회적경제와 노동운동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의 맥락을 뛰어넘어 전지구적인 보편성을 갖는 개념으로서 사회적경제를 검토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에도 사회적경제로 분류할 수 있는 조직들의 활동은 과거부터 있어 왔으나, 사회적경제 개념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사회적경제 개념은 막연하게 사용된 셈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모호한 것은 사회적경제가 19세기 이후 다양한 이념과 실천으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국가별, 학자별 견해와 처해 있는 조건이 상이하여, 사회적경제의 유사용어로 제3섹터,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시민사회, 연대경제 그리고 자원활동부문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요에 우선순위를 두는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지역사회조직의 상업적 활동과 비상업적 활동을 의미한다.

OECD는 사회적경제란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권한 보유,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한 재정적 실효성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참여자의 의사결정이 자본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의 영향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모두 배분하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명백히 추구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계효용학파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왈라스(L. Walras)는 사회적경제를 자본주의 체제의 결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데, 그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는 규범적이고 윤리적 영역으로 분배에 초점을 맞추며 정의의 논리를 포함해 다양한 논리를 다룬다(엄형식, 2008).

신명호(2009)는 사회적경제의 출발점을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무한경쟁의 시장자본주

의에 반대하고, 그것의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라고 주장한다.

폴라니는 사회적경제를 상호배려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한 경제라고 말하고 있다.

폴라니는 사회적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구성원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둘째, 자본에 의해 이윤이 배분되는 것을 제한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의사결정(=1주 1표가 아닌 1인 1표)을 선호한다. 셋째,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고 민간이 주도하면서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경제의 한 영역으로 지역이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인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김윤호, 2010:275), '사회적기업' 육성정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충청남도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정부주도로 추진중인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도정에 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총량경제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나, 지역간 발전격차가 심화되고, 성장과실의 외부유출도 심화되어, 도민이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서비스제공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제한된 의미를 넘어 서서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1년 처음으로 발걸음을 시작한 충남의 사회적경제 현황, 정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으로서의 도입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사회적경제의 의의

1)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이해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1830년 프랑스의 뒤누와이어(C. Dunoyer)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지드(C. Gide)와 왈라스(L. Walras) 등에 의해 그 개념이 풍부하게 발전되었다(유정규, 2011:28)

당시는 산업혁명 이후 본격화된 초기 자본주의의 야만성이 극에 달했던 시기로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착취와 이로 인한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었지만 당시의 지배적인 경제학에서는 '부(富)의 효율적인 창출방안'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었을 뿐, '노동대중의 고통과 그것을 치유할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 시기였다.

개혁적인 경제사상가이자 협동조합운동가였던 지드(C. Gide)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직

면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집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고, 기존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더욱 사회적(social)이고 공평한(equitable) 사회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적 체제로서 사회적경제를 상정하였다. 때문에 그는 노동조건의 개선, 주류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온갖 위기에 대한 안전보장, 경제적 자립의 보장 등을 사회적경제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신명호, 2011:28)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는 19세기 자본주의의 등장 및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집합적 전략으로 등장한 역사적 개념으로,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쇠락과 쇄신을 거듭해 왔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대중의 투쟁과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직(예,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등)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중반 이후에는 협동조합부문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동일한 영역에서 경쟁하게 되면서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의 일부로 편입되게 되었으며, 주로 의료보험기능을 담당해 오던 상호공제조합도 국가 주도의 의료보험제도가 전국화되면서 이를 보조하는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결국,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반대하고 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던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20세기 중반 이후, 국가차원의 제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경제체제의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전제로 인식되어 왔던 협동조합도 시장경쟁의 논리 속에서 생존을 위한 효율화·전문화의 과정을 택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제 더 이상 사회적경제의 상징적 존재로서 위치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즉,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노동계층에게 제공하던 사회경제적인 편익의 많은 부분을 국가와 시장이 제공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현실적 유용성이 감소하였고, 결국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상과 실천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위치는 약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전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사회적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제위기로 약화된 시장은 노동자의 대규모 해고를 가져왔고,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더 이상 늘어나는 실업빈곤층을 감당할 수 없게 됨으로써 복지국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구조적 실업과 사회적 배제는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졌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대규모의 정리해고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시장과 국가 모두 새롭게 등장한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실업해소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민조직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사

회적기업으로 제도화되었다.

특이한 점은 유럽에서는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하면서 복지축소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새롭게 대두된 반면, 우리 나라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의 경우에도 복지제도가 발전한 스웨덴의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매우 취약한 반면,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부족한 이탈리아의 경우 오히려 사회적기업이 발전했다. 국가에 의한 복지제공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시민영역에서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사회적경제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사회적경제의 개념

사회적경제 개념의 출발은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무한경쟁의 시장자본주의에 반대하고, 그것의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라는데 있다. 이것은 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폴라니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의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를 말한다(신명호, 2009).

신명호(2009)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화폐적, 비화폐적 자원을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부문, 즉 사회적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효혜적 경제활동 조직의 집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영리 민간단체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을 포함한다.

드푸르니(Defourny)는 사회적경제란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1주 1표제 배제),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4가지 원칙을 따르는 이해 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990년 왈론 사회적경제위원회).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 분류는 노대명(2007), 엄형식(2008), 신명호(2009)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노대명(2007)은 공공지원형 일자리 사업,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1>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 분류

성격 I	성격 II	유형분류	세부설명
국가 ▼ ▼ ○ ○ ○ ○ ○ 사회적경제 ○ ○ ▲ ▲ 시장	정부의존 ▲ ○ ▼ ▼ ▼ ▼ 자립지향	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	장애인 보호작업장, 노인생산공동체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노동부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자립형 공동체사업(=마을기업)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자립지향	민간지원기관	대안금융기관
			시민단체(서비스공급형)
	비영리 ▲ ○ ▼ 영리	사회적 경제조직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자료 : 노대명(2007). 한국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엄형식(2008)은 전통적협동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새로운 사회적경제(민간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기업)로 구분하고 있다. 신명호(2009)는 경제활동영역을 생산, 소비, 교환, 분배 영역으로 구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 분류

경제활동의 영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예	
생산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적일자리 사업 조직, 노동자협동조합 등	로컬푸드운동 네트워크
소비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교환	지역화폐, 아나바다운동단체 등	
분배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등	

자료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봄호, 통권 제75호: 3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공동체, 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농협⁴⁷⁾,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화폐, 공정무역, 아나바다운동단체,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조직으로 제시할 수 있다.

47)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가 등장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3) 우리 나라 사회적경제의 여건

우리 나라 사회적경제의 기원은 두레, 품앗이, 계, 향약 등의 공동체적 관계망들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경제활동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등장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시작된 협동조합운동으로부터 기원한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좌우익의 농민협동조합을 각자 구성하였으나, 정부는 1968년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을 발족하였다. 1961년 기존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농협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한 종합농협을 출범시켜 주요 경영증인사에 정부가 관여하였다.

반면, 1960년대 초부터 도시지역 중심의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972년 8월에 신용협동조합법이 통과되어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공식적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용협동조합활동가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 초부터 소비자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고, 1983년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가 창립, 1988년 한 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 창립, 여성민우회생활협동조합 등이 설립되면서 본격적 생활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생산자, 생산자단체, 문화단체 등과 공공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노동자협동조합은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1996년부터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제도적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었고, 상당부분 민간사회단체에게 위탁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시적 참여기간의 제한과 사업비 책정의 제한, 불투명한 사업 지속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 사회적일자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복지'의 개념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적 추진과 근로연계 프로그램의 부분적 도입, 적극적 시민사회의 자활사업 영역을 동원하게 되었다.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은 지속적 시민사회의 요구로 인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환되어 실업자들의 한시적 고용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7년 지속가능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전망을 사회적기업에서 찾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으로 현실화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친 우리 나라 사회적경제 여건과 관련하여 노대명(2007;53-55)은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선, 거시적으로 국가와 시장을 대변하는 세력간의 힘의 관계가 사회내에서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세계화와 개방화의 빠른 진행, 국가기능의 확대를 둘러싼 대내외적 압력증가, 분권화를 통해 지역시민들의 욕구를 세력화할 수 있는 토양의 미성숙, 일관성을 가진 정책정당의 부재 등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자율성을 가진 대안적 세력으로 육성하는 여건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복지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

적경제의 양적 성장 잠재력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복지축소를 위한 민영화 전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서비스 공급을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확대를 위한 서비스 민영화 과정에서 그 폐해 또는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활용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우리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추동할 주체세력의 현황을 검토해보면 성장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가입률은 낮으나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압도해 왔던 전통을 갖고 있으며, 기존의 협동조합 또한 사회적경제 원칙을 고수하며 확산시키기보다 영리화의 길을 택해 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표 3> 한국 사회적경제의 여건

구 분	주요항목	한국의 상황
국가/시장 관계	■ 국가의 시장장악력 강도 ■ 무역의존률과 FDI	■ 국가의 시장통제기능약화 ■ 무역의존률의 증가
국가권력 구조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 중앙집중제와 지방분권제	■ 대통령제 ■ 절반의 지방분권제
정당정치 구조	■ 정당정치의 안정성 정도 ■ 집권정당의 이념적 성향	■ 정책정당의 부재 ■ 집권정당의 비좌파적성향
노동조합 세력	■ 노조가입률의 고저 ■ 임금의 산별협상체제 유무	■ 낮은 노조가입률 ■ 산별협상체제의 부재
공공복지 수준	■ 복지체제의 유형 ■ 공적 사회지출의 수준	■ 자유주의체제에 가까운 혼합형 ■ OECD평균의 1/3수준
협동조합 전통	■ 사회적경제의 성격 ■ 협동조합의 규모	■ 협동조합 모법(母法)의 부재 ■ 협동조합의 영리화가 지배적 ■ 노동자협동조합의 저발전(10여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비영리부문 발달	■ 비영리부문의 성격 ■ 비영리부문의 규모	■ '90년대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성장 ■ 지역기반형 조직의 저발전

자료 : 노대명. (2007). 한국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56.

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도입 필요성

1)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에 대한 한계인식

2003년 정부에서 도입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초기에 발표된 연구보고서들에 의하면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2011년 2월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존립위기에 직면하거나 사업진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개발면적 축소, 지정해제 검토 등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최천운·유정석, 2011;78).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⁴⁸⁾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특구제도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72).

기업유치와 첨단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 성과는 그다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듯하다.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기업유치에 대한 무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역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인구, 소득, 일자리, 지역금융, 교육 등 지역활성화를 나타내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지자체간 발전 격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격차의 중심에 서울수도권 집중이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한편,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의존성 심화로 인해 외부자원 확보 그 자체가 지역발전의 목표처럼 인식되는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지역 스스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는 지역침체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패배주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의 역동성이 저하되어 왔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패가 중앙정부 또는 상위 자치단체의 재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달린 것처럼 평가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지원이나 외국인 투자 및 기업투자 등 외부자원의 동원이 집중되는 지역은 단기적으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회성 지원 또는 투자성과의 외부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박용규, 2009; 3-4).

2) 외형적 성장 이면의 지역경제 기반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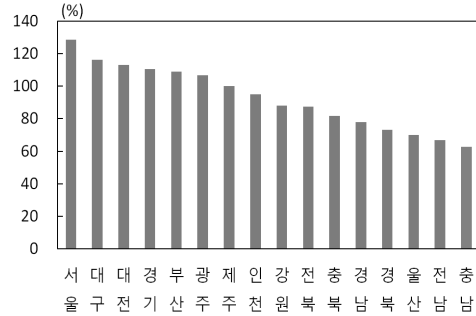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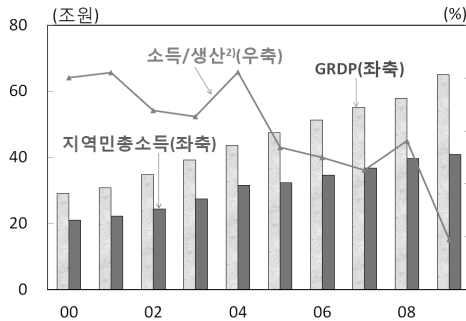
충청남도의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양적성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다. 충남은 2000~2009년 기간 중 연평균 9.0%씩 경제성장(전국 1위)을 이루었으나 취업계수는 동 기간 중 28.8에서 14.4로 감소함에서 따라 전국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산업별 취업계수 감소추이를 보면, 1차산업은 동 기간 중 73.4에서 54.9로 감소하였으며, 3차산업 또한 28.5에서 20.4로 감소하였다. 특히, 2차산업부문의 취업계수는 12.7에서 4.5로 감소하여 2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은 상대적으로 타산업 부문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2009년중 충남지역 지역민총소득은 40.9조원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65.1조원)의 62.9% 수준에 불과하다. 생산대비 총소득 비율을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충남지역은 16개 시도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⁴⁹⁾

48) 지역특구제도의 핵심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달리 특구지정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지역특구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를 해당특구지역 내에서 완화하는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간기업 및 민간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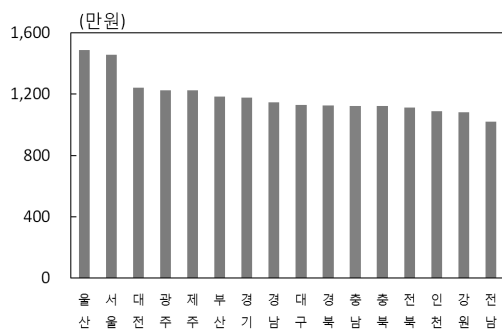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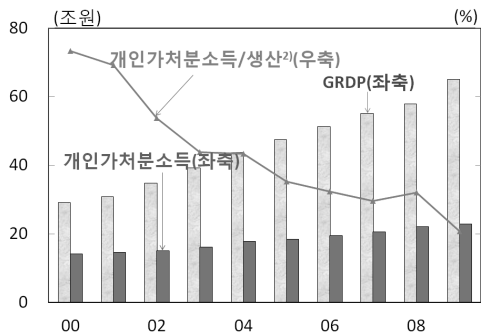
49) 총생산은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 총소득은 기업의 본사나 근로자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1). 충남지역 경제의 특징 및 발전방향 : 9.

[그림 1] 충남지역 GRDP 및 지역총소득 [그림 2] 생산대비 지역민총소득비율

특히 실제로 개인이 소비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가처분 소득은 1인당 1,124만원으로 1인당 GRDP(3,338만원)의 33.7%에 불과하며, 이는 16개 시도중 11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1). 충남지역 경제의 특징 및 발전방향 : 10.

[그림 3] 충남지역 GRDP 및 개인가처분소득 [그림 4] 시도별 1인당 개인 가처분소득

외래기업 유치에 따라 고용증대효과는 크지만 이들 대기업들은 대부분 장치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 및 생산액에 비해 고용증대효과는 낮다. 특히, 이들 기업들의 지역민 고용비중은 낮으며, 특히 대기업과 이들 대기업의 하청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자의 낮은 임금으로 사회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투자유치로 인해 주택 건설업, 유통업, 서비스업,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도권 메이저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대형마트에서 소비하고, 대형병원에서 진료하며, 수도권 대학의 분교에 다니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건강한 지역경제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외래기업 과도한 성장에 기초한 외생적 발전 전략은 오히려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건설업체, 제조업체, 병원 등 전통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3) 성장과실의 역외유출 및 불균형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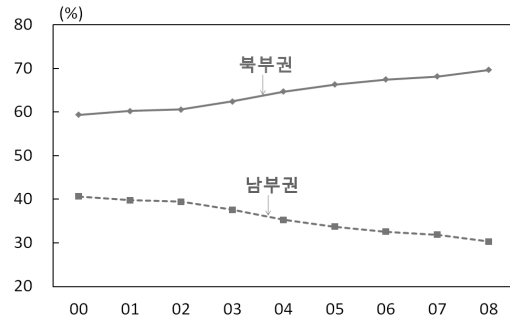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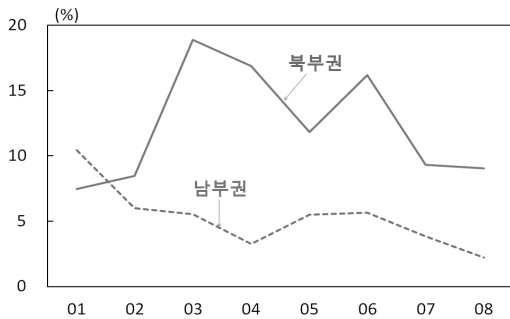
충남의 경제는 수도권에 인접한 천안, 아산, 당진지역이 충청남도 여타 시군에 비해 기업 입지에 따른 노동기회, 수도권에 가까운 지리적 조건 등에서 비교우위의 위치에 있어 급격한 지역성장 양태를 보이고 있다. 2007년 권역별 지역내총생산액은 북부권이 충남전체의 6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권역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제조업 중심의 양적성장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이들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전체 생산액의 37.2%가 타지역으로부터 이입되고 이중 45%가 수도권으로부터 이입되고 있다. 반면, 충남 전체 생산액의 43.7%가 지역외로 유출되고 이중 50%가 수도권으로 이출되고 있다.

대기업의 생산공장이 밀집해 있는 북부지역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데다 교통이 발달하여 지역소재 기업 근무인력 중 상당수가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단독부임 형태를 유지함에 따라 소비활동의 상당부분을 수도권에서 영위하고 있어 소득일부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1;14).

그 결과 전국의 타 자치단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북부권의 성장과실이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해 충남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나머지 지역은 낙후지역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내 많은 시군들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를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도 나머지 지역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충남도의 지역별 성장패턴을 고려해 볼 때 북부권의 성장모델이 나머지 지역에 유용하지 않을 뿐 더러, 북부권과 같은 성장 모델을 고집할 경우 외래에 대한 의존정도가 심화되어 지역경제는 오히려 피폐화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4) 중앙정부의 분절화된 CB 및 SE시책의 통합적 대응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1). 충남지역 경제의 특징 및 발전방향 : 15

[그림 5] 충남권역별 GRDP 성장률

[그림 6] 충남 권역별 GRDP비중

근래에 들어와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과 관련한 연구와 시책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앙정부의 CB 및 SE와 관련한 시책들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는 일자리창출과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자립형공동체사업),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가소득증대와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식경제부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배양을 위해 지역자활사업, 여성가족부는 취업기반이 부족한 농촌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촌여성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관련사업의 필요성과 유사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부처간 이해관계로 인해 가급적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실제로 지원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와 관련 있는 다양한 부서에서 사업을 나누어 추진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할 수 밖에 없다. 즉, 부서간에 추진되는 CB 및 SE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중복되어 선정되어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중앙정부의 다양한 CB 및 SE시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풍부한 개념인 사회적경제 정책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표 4>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사업 현황

사업명	관련부처	주요 사업내용	특징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노동부 (2007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사회적 기업 인증제 도입 - 2010년 현재 268개 사회적 기업 인증, 각종 경영·재정· 홍보사업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초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행정안전부 (2010년)	- 화랑근로사업의 후속조치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병행 추진	-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병행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	농수산식품부 (2011년 예정)	- 노동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농촌조직 진출의 한계 극 복	-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 스에 초점(지역성과 수익 성 강조)
기 타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 지역혁신센터 내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능강 화에 초점을 맞춘 시범사업(지식경제부) - 노동부와 MOU를 통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육 성(문화관광부)	- 지식경제부는 시범사업, 문화관광부는 고용노동부 와 MOU체결 통해 추진

자료 : 지경배, (2010).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국책브리프 제80호. 강
원발전연구원:9.

4.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의 추진실태

1) 충남의 사회적경제 현황

(1) 사회적경제 조직현황

충남의 사회적경제관련 조직현황을 노대명이 분류한 기준을 근거로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 관련조직이 258개소,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이 132개소, 민간지원기관인 대안금융기관이 3개소, 사회적경제조직이 1,111개소로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지역농협 426개(38.4%)를 제외하고 나면, 충남의 사회적경제 블록은 그리 크지 않고 가 치실현의 측면에서도 유럽에 비해서는 그 역할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표 5> 충남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현황

유형분류	세부설명	조직수
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	① 장애인 보호작업장	15
	② 노인생산공동체	243
	③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
	④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	⑤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81
	⑥ 노동부 사회적기업	17
	⑦ 행정안전부 자립형 공동체사업(=마을기업)	32
	⑧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	-
	⑨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2
민간지원기관	⑩ 대안금융기관	3
사회적	⑪ 시민단체(서비스공급형)	359

경제조직	12 노동자협동조합	-
	13 소비생활협동조합	17
	14 지역농협	426
	15 수협	8
	16 산림조합	18
	17 신협	105
	18 새마을금고	62
	19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희망업체	116

자료: 임준홍·김양중. (2011). 충남 사회적경제의 실태와 정책방향. 열린충남. 제56호, 충남 발전연구원:17.

(2) SE 및 CB 현황

2011년 10월말 현재 충남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노동부사회적기업 17개, 예비사회적기업 4개, 충남형사회적기업 58개, 행안부 주관 마을기업 32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농어촌공동체회사 2개 등 총 113개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4개, 서천군 13개, 논산시 11개, 아산시 9개 등의 순이다.

<표 6> 충남도내 CB 및 SE 현황(2011.8)

(단위 : 개)

구 분	계	사회적기업		충남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2010	2011	2010	2011	
계	113(1)	17	4	17	41	10(1)	22	2
천안시	14	4	1	3	4	1	1	
공주시	8	2		1	2	1	2	
보령시	2				1		1	
아산시	9	1	2	2	3		1	
서산시	7	1			4		2	
논산시	11	2		2	4		3	
계룡시	1						1	
금산군	7	2		1	3		1	
연기군	6	3		1	1		1	
부여군	7	1		1	1	2	1	1
서천군	13			3	7	1	2	
청양군	6			1	2		2	1
홍성군	6		1	2	1	2	0	
예산군	7(1)				5	1(1)*	1	
태안군	4				1	1	2	
당진군	5	1			2	1	1	

*2010년 예산군 마을기업은 현재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

① (예비)사회적기업

2011년 10월 현재 전국의 사회적기업수는 565개이며, 충남의 사회적기업수는 17개로, 제주(11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적은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시도별 사회적기업 현황(2011년 10월 기준)

시·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인 증	565	129	30	28	35	24	17	18	100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 증	33	25	17	25	25	27	21	11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 2011년 10월 21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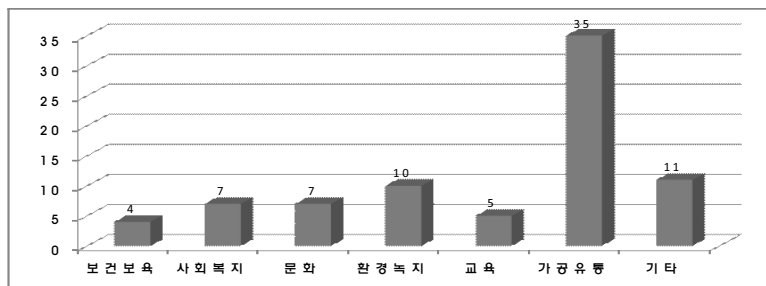
반면, 2010년부터 시작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수는 2011년 10월 현재 58개소,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 등을 포함하면 충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79개에 달한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공·유통분야 35개(44.3%), 환경·녹지분야 10개, 기타분야 11개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공유통분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복지분야가 5개(29.4%)로 가장 많은 반면, 충남형 사회적기업은 가공·유통분야가 31개(38.8%)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가공·유통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표 8> 분야별 사회적기업 현황(2011년 10월 기준)

구 분	계	보건보육	사회복지	문화	환경·녹지	교육	가공유통	기타
계	79	4	7	7	10	5	35	11
인 증	17	3	5	—	3	2	2	2
예 비	4	—	—	1	1	—	2	—
지역형	58	1	2	6	6	3	31	9

(단위 : 개)



[그림 7] 충남도 분야별 (예비)사회적기업 수

충남 사회적기업의 시군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12개, 서천군 10개, 아산시와 논산시가 각각 8개 순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계룡시는 사회적기업이 한 개도 없고, 보령시와 태안군은 각각 1개에 불과하다.

<표 9> 시군별 사회적기업 현황(2011년 10월 기준)

구분	합계	인증	예비	예비·지역형
계	79	17	4	58
천안시	12	4	1	7
공주시	5	2		3
보령시	1	-		1
아산시	8	1	2	5
서산시	5	1		4
논산시	8	2		6
계룡시	-	-		-
금산군	6	2		4
연기군	5	3		2
부여군	3	1		2
서천군	10	-		10
청양군	3	-		3
홍성군	4	-	1	3
예산군	5	-		5
태안군	1	-		1
당진군	3	1		2

이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판단된다.

충남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유형을 살펴보면 상법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가 37개로 전체의 46.8%, 영농(어)법인 18개(22.8%), 민간단체 14개(17.7%) 등의 순을 차지하고 있다. 상법회사가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은 설립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설립이 쉬운 상법회사 특히 주식회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조직유형별 사회적기업 현황(2011년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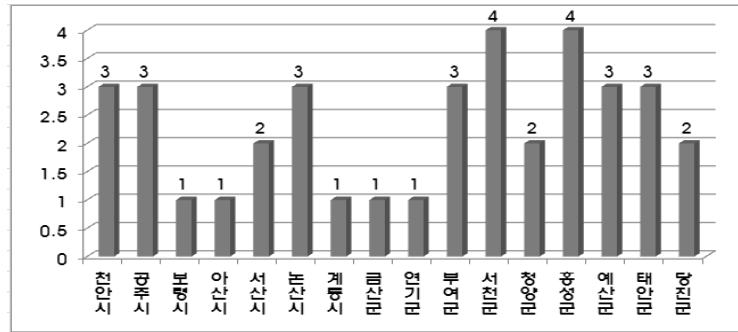
구분	합계	상법회사	사단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민간단체	영농어조합	소비자생협	농협
합계	79	37	6	2	14	18	1	1
인증 사회적기업	17	9	1		6	1		
예비 사회적기업	4				3		1	
지역형 사회적기업	58	28	5	2	5	17		1

②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은 2010년 11개, 2011년 26개 등 총37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2011년 4개 마을기업은 2차 사업으로 재선정⁵⁰⁾되어 2010-2011년 기간중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33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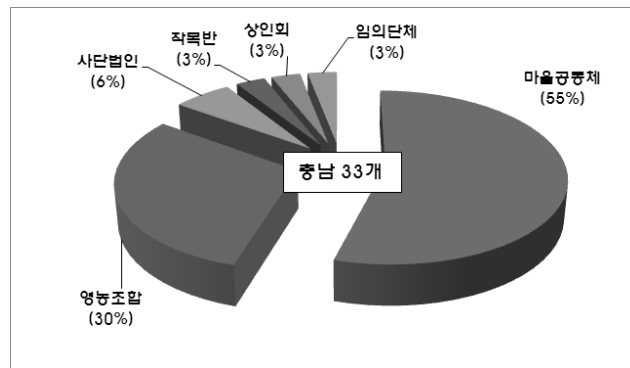
시군별로는 서천군과 홍성군이 각각 4개,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이 각각 3개씩 분포하고 있다.

50) 천안 양곡마을회, 서천 홍림2리 마을회, 홍성 홍동 문당권역 3개단체, 홍성 홍동마을 자치주민 모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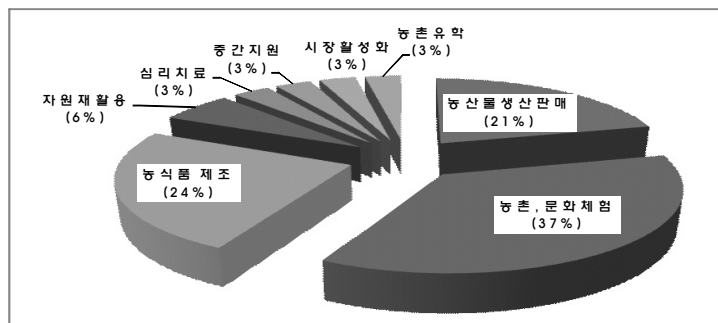
[그림 8] 시군별 마을기업 현황

마을기업 조직유형을 보면, 마을공동체가 18개(55%), 영농조합이 10개(30%), 사단법인 2개(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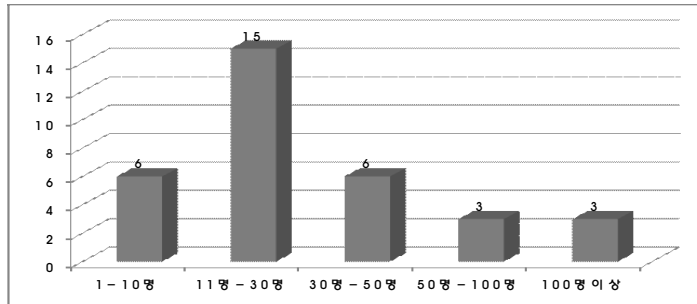
[그림 9] 마을기업 조직유형

마을기업 사업내용을 보면, 농촌·문화체험이 12개(37%), 농식품제조 8개(24%), 농산물생산·판매 7개(21%) 등의 순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0] 마을기업 사업내용

충남도 33개 마을기업의 총 회원수는 1,150명으로 기업당 평균 34.9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마을기업의 회원규모는 11명~30명이 15개(45.5%), 1명~10명과 31명~50명이 각각 6개(18.2%)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50명 이하 중소규모 회원규모를 가진 기업이 27개(8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마을기업 회원규모

③ 농어촌공동체회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어촌공동체회사로 부여군이 밤프레영농조합과 청양군의 꽃피영농조합 등 충남도에는 2개가 선정되어 있다. 그러나 밤프레영농조합은 충남 예비사회적기업, 꽃피영농조합은 마을기업으로 중복지정되어 있다.

2)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현황

(1) 충청남도 차원

① 충남사회적경제기획단 운영

충남사회적경제기획단은 충남 사회적경제의 성장기반 구축 논의와 실천노력의 확산을 통해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를 실현하고, 내생적 발전을 통한 자립적 경제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구원, 도의회, 전문가, CB 및 CS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⁵¹⁾에 의거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로 설치될

51) 제8조(특별위원회) : ①제2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도정의 특별한 사안이나 둘이상 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언·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한다.

계획이나, 위원회의 전단계인 ‘충남사회적경제기획단’이라는 형태로 구성 및 운용해 왔다.

‘충남사회적경제기획단’에서는 수 차례의 기획단 회의와 함께 사회적경제를 민선5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 28일 충남도지사와 도공무원, 도정책자문위원, 전문가, 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이 참석하여 충남사회적경제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우선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도 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도청 실과 및 사업소, 시군 공무원의 사회적경제 이해, 사회적경제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우선 공무원교육원에 단기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개설하여 교육하였다. 또한, 2012년도 사회적경제를 도정의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반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② 충남사회적경제 T/F팀 설치

충남도청에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역형사회적기업(충남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 내에 충남사회적경제T/F팀이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경제 T/F팀의 구체적 업무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총괄, 충남형 사회적기업 추진, 자립형공동체사업(마을기업) 추진,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사회적기업 민관협력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 사회적일자리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지원 등이다. 사회적경제 T/F팀에서는 사무관 1명 등 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림 1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T/F 조직도

그러나 사회적경제 T/F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관련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충남도 사회적경제영역인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여성가족부 여성일자리창출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 NGO,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경제 통합기능 및 각 부서간 조율업무와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역시, 담당 부서를 설치할 만큼 사회적경제에 대한 업무영역이 충분하지 않으며,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업무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도 미흡한 실정이다.

(2) 지방의회 차원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충남도의회사회적경제연구회”를 구성 및 운영 중에 있다.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따른 행정, 재정적 지원과 정책개발을 연구하고, 충남의 사회적경제활동가와 의회, 대학, 민간단체 등 지원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교류와 역량강화, 상품우선구매 등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회는 도의회의원, 연구원, 사회적기업대표,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 규모는 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다. 연구회운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도의회차원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집행부의 중장기적 사회적경제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방안, 방향설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도의회연구회만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시군의회에서도 연구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11> 도의회사회적경제연구회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사회적경제 정책관련 연구활동지원	사회적경제사업의 발굴, 육성,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및 활동을 지원함
우선연구과제 선정워크숍 개최	사회적경제관련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세미나 및 워크숍개최
관련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선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관련현장 방문 답사 및 의견교환, 토론회 개최(9월 6-7일 원주지역 사회적경제 학습을 위한 현장방문 등)
보고서발간 및 배포	연구사례집 발간, 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3) 중간지원조직(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차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충청남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전문지원기구 설립)와 충남도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10년 12월 22일 충청남도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되었다. 센터는 박사급 연구인력 2인, 학사1인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근 연구위원 1인, 상담인력 1인, 과제에 위촉된 연구원 1인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연구는 충남발전연구원내 연구진들이 주도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영역의 기반확충 및 저변확대를 위한 조사, 연구, 워크숍,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과 공생에 기초한 커뮤니티 조성(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기능), 충남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발굴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시책의 통합적 지원 및 조정(중간지원조직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은 충남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 조성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분야 정책개발 선도 및 지원 등이 주요사업이다.

첫째, 충남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사회적경제영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및 실천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과 대상, 국내외 정책 및 사례 분석, 충남의 사회적경제생태계 분석,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와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충남발전연구원의 전략과제로 추진하되, 부서간 협력,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로 수행하고 있다.

둘째,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충남사회적경제의 실태분석,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 전문가, 실천가들이 참여하여 발제후 토론하는 형태로 매월2회 주기로 개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의 이해, 국내외 선진 사회적경제 사례 등이다. 사회적경제연구회는 충남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셋째, 조성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는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자들이 교류하고 학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적경제분야(생활협동조합, 지역화폐,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포럼개최 등이다. 추진방법은 충남발전연구원-센터-전문가-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적경제분야 정책개발 선도 및 지원은 충남도와 시군이 사회적경제를 핵심시책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개발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인재양성, 지역사회기여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충남형커뮤니티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을 충남발전연구원-도·시군-지방의회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표 12>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 연속워크숍 내용

구분	일정	주 제	발표자	비고
사회적경제의 이해	3월 25일	-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김신양(성공회 대학교)	기초학습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
	4월 1일	- 캐나다의 사회적경제 - 충남도 현황	이은애(씨즈 혁신사업단장) 송두범(사회적경제지원센터)	"
	4월 19일 (화)	- 영국의 사회적경제 -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조우석(소기업발전소) 최혁진(원주의료생협 전문이사)	"
	5월 3일 (화)	- 일본의 사회적경제 - 성미산 마을만들기	강내영(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조경민(마포희망나눔)	"
실태 분석	5월 19일 (목)	- 충남 사회적경제 여건분석 -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	김양중(충남발전연구원) 이은애(씨즈 혁신사업단장) 송두범(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 자문회의

사회적 경제의 이론 및 실제	6월 8일 (수)	- 원주의 사회적경제 - 대구·경북의 사회적경제	최혁진(원주의료생협) 류병윤(대구경북사회적 기업지원센터장)	기초학습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
	7월 7일 (목)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포괄) - 사회적경제와 주거협동조합	하승우(지행 네트워크) 함영진(보건복지정보개발원)	"
	7월 21일 (목)	- 사회적경제와 지역화폐 - 사회적경제와 기금(펀드)	김성훈(민들레의료생협) 이희수(사회연대은행)	"
	8월 10일 (수)	- 사회적경제와 시민단체(포괄) - 풀뿌리사람들(구체적)	이란희(제3섹터 연구소) 김제선(풀뿌리사람들)	"
	8월 31일 (수)	-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CB) - 사회적경제와 정부정책	유정규(지역재단) 김동준(엔씨스콤 이사)	"
	9월22일 (목)	-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	김양중(충남발전연구원) 이은애(씨즈 이사장) 임준홍(충남발전연구원)	"
	10월 6일 (목)	-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최조순(서울시립대)	"

② 중간지원조직 기능수행

중간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이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과 조언, 인재 육성 및 확보, 재정 및 경영지원, 홍보마케팅, 조사 및 연구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사업자의 발굴 및 진입지원, 선정된 사업자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등이 주요사업이다.

첫째, 예비사업자의 발굴 및 진입지원은 예비사업자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모델 컨설팅을 통한 충남형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남도내 지역사회 자원발굴, 아카데미, 예비사업자를 위한 현지상담, 컨설팅, 센터내에 상시상담 및 컨설팅을 센터와 전문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선정된 사업자의 성공모델 창출은 충남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성공모델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기적 사업장방문 컨설팅, 센터내 상시 경영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진입 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센터와 전문컨설팅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은 예비 및 선정사업자들에게 선진운영기법, 성공사례, 정책동향 등의 정보제공, 선정사업체의 대외홍보를 통한 운영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홍보책자 발간 및 배포, 지역언론 및 도정신문, 충남발전연구원 웹진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원-충남도·시군-센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13>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기 능	역 할
정보의 수발신	•NPO나 행정, 기업 등 각 주체에 대한 정보수집,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전달
자원과 기술의 중개	•정보제공이나 상담업무 이외에 NPO법인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금, 인제 등을 지원하거나 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공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
인재육성	•NPO법인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직운영, 자금확보 등에 대응가능한 인재양성
상담 및 컨설팅	•NPO법인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매니지먼트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관련된 문제나 어려운 점을 컨설팅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누구나가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 개최(행사, 포럼, 심포지엄 등) •관련 NPO를 네트워크하거나 각각의 NPO법인이 가진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코디네이트 역할 수행 •지역자원(사람, 물건, 돈 등)의 마케팅, 협력관계(행정, NPO, 기업 등)의 코디네이트 제공
평 가	•NPO활동의 지표를 활용하여 활동실태나 정보에 대한 수준을 정부, 기업, 개인 등 지원기관에게 제공
정책제안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 시기거나,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만들어냄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시스템이나 방법을 구축, 정책제안기능을 강화
조사연구	•정책제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활동으로 중간지원조직만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해 특정 사회이슈의 해결방안을 제시

자료 : 內閣府. (2002). 『中間支援組織の現實と課題に関する調査報告書』 第一總合研究所.

(4) CB 및 SE 네트워크 차원

①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지역내 CB 및 SE가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도 지부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건강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상생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의 가치 실현과 성장을 도모하며 사회적기업간의 교류 및 협력강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는 충남지역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2011년 6월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지부 등기를 완료하고 활동중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직사업, 네트워크사업, 정책사업, 교육사업, 마케팅 및 홍보사업,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인증 지원사업 등이다.

②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충남지역내에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NGO,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습활동 및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한 민간조직으로서 향후 충남지역의 사회적경제 기반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5.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 과제

1) 충남사회적경제 정책의 문제점

충청남도에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목적 추구를 강조하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의 협소성으로 인해 호혜성과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적경제를 도정의 핵심시책으로 도입하여 추진코자 한다.

그러나 현재 도정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사회적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책결정자와 시민단체, 연구자들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책적인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취약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충남도와 시군 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는 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하나도 없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방안만 제시하고 있어, 보다 광의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둘째, 충남도의 지역경제가 지나치게 외부의존적이라는 점이다. 충청남도는 그 특성상 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수도권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수도권에 대한 의존정도는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경제는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내 대학역시 수도권 대학생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⁵²⁾

이와 같이 충남북부지역 시군(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지역경제는 지역내부의 노력보다는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한 수도권 요인에 힘입은 바 크다. 북부권과 가까운 나머지 시군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부의존형 지역경제의 수혜를 입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도적, 지역 자립적인 내발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에 소홀하였고 사회적경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여전히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상당 부분은 외부의존적 기조로 유지하고 있고, 그 효과가 단기적, 직접적이지 않고, 성과의 규모 또한 파격적이지 않는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사회적경제가 미처 성장기반을 갖추기도 전에 영리기업과의 경쟁을 강요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은 기존 기업들도 있지만,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해 신규창업하는 기업도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본의 영세성과 취약계층 중심의 인력구성, 초기

52) 임준홍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천안에 위치한 10개의 대학에는 62,490명의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는 천안인구의 11.3%를 차지한다고 한다. 대학재학생중 75.2%는 수도권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

투자비용 조달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영리기업과 견주어 열악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나친 성과 및 실적위주의 평가로 인해 영리기업과 차별되지 않는 경영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들이 초기 필요한 수요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안적금융기관의 접근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넷째,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시책의 협력 및 연계체계가 미흡하다.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통합되거나 연계가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의 해당부서는 부서업무의 원활한 수행에만 관심이 있고 유사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연계하는 수고를 기피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런 점은 사회적경제 정책업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공동체, 여성일자리사업 등을 각기 다른 부서가 담당하고 있어 이들 업무를 조율가능한 부서가 없는 한 통합 및 연계추진은 어렵고,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수행하기에도 벽찬 실정이다.

다행히 충남도의 경우 사회적경제T/F팀이 설치되어 있어 업무의 통합 및 연계추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육성사업만 이 부서에서 다루어질 뿐 여타 사회적경제 부문은 여전히 개별 부서중심의 분산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사회적경제를 기초 및 커뮤니티 차원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이 부재한다. 충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사회적경제 기반 확충, 행정과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경제 주체간 조정 등에 중점을 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기초 및 커뮤니티단위 중간지원기관은 현장에서 사회적경제의 실천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차원에서 차별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기초 및 커뮤니티단위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은 미미한 실정이다.

여섯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정건수 달성목표에 대한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 민선 5기 충남도의 지역형사회적기업 인증목표는 200개이다. 매년 50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 및 인증해야 하는 셈이다. 충남형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7개 지정요건 중에서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이익의 재분배 등 네 가지를 지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적기업에 비해서는 지정이 용이하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도내에 대도시가 없어 도시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농촌 역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만한 잠재적 자원 확보가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매년 50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정책목표에 연연하다 보면, 사회적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역량 및 공동체기반 강화를 소홀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정건수 달성목표에 대한 부담으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2) 충남사회적경제 정책의 향후과제

충남도에서 사회적경제를 핵심도정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용어의 생소함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해오던 사회적경제를 광역자치단체 정책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는 충남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평가절하되지 않았으면 한다. 충청남도가 도입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결정자, 도민, NGO의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이미 OECD, EU 등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소한 용어임에는 틀림없다. 사회적기업과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과의 차별성도 명확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외생적 전략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기업유치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기업유치는 나름대로 지역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기업유치가 양질의 지역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여성이나 미숙련 노동력의 취업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기업유치로 인한 세수의 확보, 기반시설 확충, 고용자의 유입 등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고, 이를 대체할만한 발전전략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기업유치와 같은 외생적발전 전략에 대한 의심 없는 수용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전략에 익숙해지면 지역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불균형을 확대하며, 내발적인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을 이끌어낼 동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지역경제의 외부의존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 방식이며, 사회적목적에 봉사하는 경제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의 이익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를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외래형 발전 전략으로는 여성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즉, 외래형 발전전략은 배제적 발전전략인 셈이다. 배제적 발전전략에서 포용적 발전전략으로의 지역발전전략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회적경제에 입각한 지역발전전략의 구축은 이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 지점이 될 수 있다(김정원 외, 2007: 106).

셋째, 사회적경제의 실현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의 체계적 육성이 요구된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으로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노동부사회적기업,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충남도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관 고유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중간지원기관은 사회적경제라는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어야 하고, 중간지원기관간의 연계 및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 충남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구 분	역할 및 과제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사회적경제조직, NGO의 동향, 통계, 발간물, 교육프로그램, 행사, 생산제품 등에 대한 자료 수집·후 홈페이지, 웹진, 뉴스레터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제공 ●재정확충 및 각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사회적경제 조사·교육·연구 및 정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조사 ●도, 시군 공무원, 충남도민, NGO관계자에 대한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 교육 ●사회적경제 정책도입을 위한 시책발굴 ●도 산하 연구원들간 사회적경제 정책개발을 위한 교류·협력연구
사회적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경영지원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기금조성 ●경영, 세무, 노무, 회계, 홍보,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가 및 활동가로 하여금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 할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조직간,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행사개최, 공동홍보 및 마케팅 코디네이트, 사회적경제 협의체와 교류협력 ●지역사회내 행정, 대학 및 지역언론, 기업, 사회적기업 및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자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자료 : 송두범. (2011). 충남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열린충남. 제56호 : 38.

또한,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 뿐 아니라 기초 및 커뮤니티 단위의 중간지원기관이 공존해야 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 중간지원기관 뿐 아니라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중간지원기관도 설립도 필요하다. 중간지원기관은 사회적경제의 창업, 운영, 사업전개, 자금조달, 인재육성, 상담, 홍보, 코디네이터,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활동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충남도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간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도 및 시군자치단체-도의회-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 개별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협, 협동조합, 자활공동체)간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물론, 도와 시군자치단체간, 도와 시군의회간, 사회적경제 조직간에도 협력 및 파트너십형성이 중요하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의회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를 지방정부 지역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에서는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가 있지만, 이들간 협력 및 파트너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기업과 B기업이 동일한 사업을 하지만, 세부생산품목이 다를 경우 양 기업이 협력을 하여 생산하거나, 소비처를 공유하게 되

면, 다양한 품목의 생산으로 양 기업 모두의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경제 블록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2007: 103-104). 원주의 경우 약2만명 가량의 인구가 원주 내 협동조합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원주내의 기존 생활협동조합과 원주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은 현재 원주협동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내에서 빈곤이나 복지, 문화 등의 영역에서 공동의 실천을 해나가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생활협동조합들이 지역내 문제에 비판과 참여를 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중산층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원주의 사례는 생활협동조합들이 비영리자활지원조직들과 결합해서 지역내 사회적경제블록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릉에서는 (사)함께하는 세상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경제블록 구축을 모색하고, 청주의 자원순환포럼은 환경단체와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의 연계로 구성되어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블록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사회적경제블록을 구축하는 것은 비정부부문 스스로 지역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민-민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나가는 활동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경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안금융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전히 사회적기업 등은 재원, 조직, 인력 등의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이며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크레딧 확충 및 사회적경제 기금조성 등의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이 글은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현황, 충남도의 사회적경제정책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한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왜 이 시점에서 사회적경제의 도입이 필요한지? 충남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 및 의회, 중간조직, CB 및 SE의 동향을 중심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충남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고, 대다수의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은 분명하다. 중앙정부 주도로 시작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률의 제정, 언론을 통한 소개, 시책 추진 등으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여전히 낯선 용어임에 틀림없다.

이미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로컬푸드, 의료생협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업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해 왔기에, 앞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보다 활발한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의 외부의존적 경제에서 탈피하여 지역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개략하는 내발적 발전전략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주민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중앙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시책을 갈때기로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내에 사회적경제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에 대한 공감대형성 및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연대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국가나 광역차원을 넘어 기초자치단체 정책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 국회예산정책처. (2010).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평가. 사업평가 10-06 : 72.
- 김윤호. (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 사회적기업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1호 : 275.
- 김정원 외(2007). 지역적합형 사회적기업 모델수립 방안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 김정원. (2011). 지방정부의 지역중심 사회적기업 개발정책 제언. 지역재단 개원7주년 기념 심포지엄 : 133.
- 노대명. (2007). 한국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 박용규 외. (2009).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지역경제활성화.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3-4.
- 박용규. (2009). 커뮤니티비즈니스 도입 및 활용방안 : CB활성화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위원회 보고자료.
- 박진도. (2011).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이론과 실제.
-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2007). 지역적합형 사회적기업 모델수립 방안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103-104.
- 송두범. (2011). 충남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열린충남. 제56호 : 38.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봄호. 통권 제75호.
- 엄형식. (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기업: 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정책연구원.
- 유정규. (2011).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발전과제.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한국지역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지역사회학회 : 28.
- 임준홍·김양중. (2011). 충남 사회적경제의 실태와 정책방향. 열린충남. 제56호. 충남발전연구원 : 17.
- 임준홍·김양중·송두범. (2010). 충남형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충남리포트. 제45호.
- 지경배. (2010).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국책브리프 제80호. 강원발전연구원.
- 최천운·유정석. (201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개발전략의 적합성 분석 : 산업연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3권 제1호. 한국지역개발학회: 78.
- 현대경제연구원. (2010).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 경제주평. 통권 383호.
- 현대경제연구원. (2006). 커뮤니티비즈니스 : 지역경제활성화의 새모형, Global Management Insight.
- 內閣府. (2002). 『中間支援組織の現實と課題に関する調査報告書』第一總合研究所.